

Left21.com

제114호 | 2013년 10월 28일 ~ 11월 10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복지 박기

마녀 사냥

민영화

부정

전교조 탄압

선거

추진

전교조

탄압

선거

부정

복지

먹튀

민영화

추진

복지

먹튀

민영화

추진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 관련 기사 3, 8, 9, 16 면

누구의 말일까요?

“노벨평화상은 내가 수상해야 했다.”
자국민을 10만 명 넘게 학살한
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

“나는 매일 관저에서 [핵발전소 사고
가 난]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있으며,
맛도 보장할 수 있다.”
일본 총리 아베, 뭘 먹고 저런가 했더니

“국정원 직원은 몇달 달면 안 되냐. ...
심리전이란 적군한테만 하는 게 아니
라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것.”
새누리당 김진태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임금은 좀 양보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TV 공익광고에서,
누구 맘대로?

“간첩”, “박쥐새끼”, “개종자”, “기동서
방”, “중북빨갱이”, “매국노”
국정원 트위터에서
문재인, 안철수를 지칭한 표현들

“통합진보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
새누리당 김진태

“자유 언론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
할 수 없다.”
종편에 대한 국정감사에 반발하는
(조선일보)

“RO 조직원들이 최소 7백 명”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의 '아님 말고'

“서울지검에 김일성 교시를 받은 검사
는 없는지 알아보라.”
새누리당 정갑윤

“녹조가 생기는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
는 뜻”
이명박, '녹조라떼'를 먹어야 정신차리려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슨 잡범처럼 돼
버렸다. 내란음모 정도는 돼야만 진보
내지 혁명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다
는 식으로 돼 버렸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11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12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넌편(오아시스빌딩)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13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토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16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11~13일)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월요일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월요일 11:50~12:50
원광대 학생회관 로비 월요일 12:00~13:0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입구 화요일 14:30~15:30
인천대 학생회관 입구 화요일 12:30~13:3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수요일 12:00~13: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밀양 송전탑 건설

거짓말이 드러나도 멈출 줄 모르는 핵 노름

10월 16일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재시험을 통과하
지 못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
도됐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등에 식
은땀이 흘렀을 것이다. 이 제어케이블은
지난해 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된 부품이다. 그런데
한전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내년 8월
부터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
이었다.

한전의 계획대로 핵발전소가 가동됐
다면 얼마나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더구나 한전은 이제껏 ‘내년 여름 전
력수급을 위해서는 신고리 3호기를 내
년 8월에 가동해야 하고, 이 때문에 밀
양 송전탑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
해 왔다.

그러나 제어케이블의 성능 재시험 실패로 이 계획은 물 건너 가 버렸다. 그러자 그동안 ‘여름 전력난’을 떠들던 정부는 돌연 “(예비전력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다 또 다른 거짓말을 실토해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사과는커녕 ‘내년 말까지는 가동하겠다’며 여전히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외부 세력’ 운운한 것도 모자라 ‘기획 체포’ 소리까지



박근혜 정부는 주민들이 죽든 말든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기세다.

들어 가며 현지 주민을 구속했다. 밀양의 주민과 활동가 들을 때리고 짓밟는 것도 여전하다.

UAE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신고리 3호기를 내년 말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신제품의 성능 시험과 재설치, 시운전까지 1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부실 부품 사용 등의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밀양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빼앗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할 핵 노름이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인 지배자들을 막아야 한다.

강병준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꿈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에너지기본
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
계획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
을 보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 목표
치인 41퍼센트에서 22~29퍼센트로 ‘줄
이겠다’고 돼 있다. 현재 핵발전 비중은
24퍼센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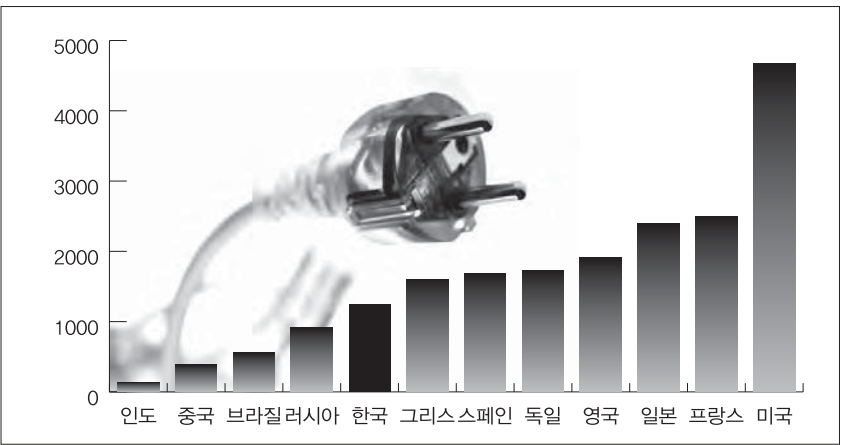
이런 시늉이라도 나온 것은 2011년 일
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계속 커
져 온 반핵 여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처럼 ‘비중 축소’는 완전한 꿈수다. 절
대량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전
력 생산량이 크게 늘면 실제로는 그 목표
에 맞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 핵발전
비중을 22퍼센트로 해도 핵발전소 12개
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29퍼센트면 18개를 새로 지어야 한다.

초안에는 기가 막히게도 “원전시장 진
입장벽[을] 제거”해 “경쟁[을] 촉진”해서
“비리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
자는 제안도 실려 있다. 후쿠시마에서 사
고를 내고 지금도 무책임하게 방사성 물
질을 흘려 보내고 있는 도쿄전력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민간 발전회사다.

이처럼 초안은 핵발전 확대 계획이다.
심지어 “수출주력노형(APR-1400)에
특화된 체계적 교육·훈련을 거쳐 해외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출처 : UNSD, World Bank, 2010.

사업 요원으로 양성”한다고 하는 등 핵발
전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줄어든 핵발전 ‘비중’만큼 화력
발전을 늘릴 계획이다. 환경 파괴나 온실
가스 문제는 “비용효과적”으로 즉, 경제
효율 논리에 종속시켰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결
국 이번에도 공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
다.

무엇보다 초안은 가정용 전기요금 대
폭 인상 가능성에 문을 열어 뒀다.

그러나 정부와 주류 언론의 왜곡과 달
리 이 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혀 싸
지 않고 가정용 전기 사용량도 많지 않다
[그림]. 따라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릴 뿐, 전기 사용량

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

정부는 워킹그룹에 참여한 환경단체
리더들에게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
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고 심지어 그것이
뒤통으로 되지 않자 아예 회의록을 작성하
지 않고 버렸다.

그런데 이 초안을 만든 민관워킹그룹
에 참여한 일부 환경단체 리더들이 그 결
과를 일부 두둔하려 드는 것은 우려스러
운 일이다.

사회적 합의?

보도자료가 보여 주듯이, 애당초 정부
가 민관워킹그룹을 만들어 환경단체 리
더들을 참여시킨 목적은 명백하다. “국
민 행복시대의 신에너지 정책, 큰걸음 내
딛다. —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가 모여

에너지믹스 합의(안) 도출”

실제 회의록에 드러난 회의 과정을 살
펴보면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제1차에너
지기본계획보다 낮추는 것으로 양보하
는 척하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에서 환경단체 리더들의 양보를
유도한 뒤 마지막에 뒤통수를 친 듯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
나기 시작한 뒤에도 주요 환경단체 리더
들이 민관워킹그룹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일부 환경단체 리더들은 ‘탈핵’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장외에 남느니 핵발전
을 일부 축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 기구에
참여하는 게 낫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이번엔 드러났듯이 환경단체 리더
들의 ‘참여’는 정부 정책에 명분을 주고 불필
요한 타협만 낳았다.

또, 환경 문제의 원인을 전체 사회구조
에서 찾기보다 대중의 전기 ‘낭비’에서 찾
다보니 전기요금 인상에도 분명히 반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
에서 갈수록 핵에 의존하려는 지배자들
에 맞서는 게 핵심 과제다.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기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책임을 노동자들
에게 떠넘기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대중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장호중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 개혁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종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

11월 9일(토) 저녁 7시 | 여의도 문화마당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0일(일) 오후 1시 | 서울시청광장
전국노동자대회

진주의료원 폐원 원천무효! 매각청산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홍준표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0월 30일(수) 오후 2시 | 강남 청원 경남도청 앞
주최: 보건의료노조

총체적 대산개입 규탄!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7차 범국민 촛불집회
11월 2일(토) 오후 6시 | 장소 미정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산개입 시국회의



여기저기서 빼꺾대는 ‘유신스타일’ 노동자·민중 운동은 균열을 분열로 만들 힘을 갖고 있다. 10월 19일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김문성

박근혜가 처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땃글’을 달았다. 국가보훈처는 반‘종북’ 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긴급 통화를 해 가며 관련 수사를 조직적

으로 은폐했다. 이제는 국방부의 ‘트윗’ 공작까지 드러났다.

국가기관과 집권당이 총출동했고, 국정원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이종명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민간심리전부 소속이었다. 국가보훈처의 반공 특강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강사로 나섰다.

‘오빠 MB스타일’ 같은 엽기 영상을 국정원과 국방부, 십알단 등이 서로 추천하

며 퍼날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선거 개입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정권 탄핵감이다! 그런데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2011년에 국방장관 직할부대로 삼은 장본인이 지금 국방장관인 김관진이고, 이 부대 사령관이던 연제욱은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 사례들은 박근혜가 총체적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게다가 윤석열은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넣어 왔다고 폭로했다. 정치공작의 실행뿐 아니라 은폐와 몰타기도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온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은 ‘이제는 대통령 사라고 끝낼 때가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소심하던 민주당과 문재인조차 ‘불공정 선거’를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해 가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기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통성이 결렸을 뿐만 아니라, 선불리 꼬리자르기 하다가는 우파 결집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키우냐라는 일부 우파의 불평을 들으면

서도 채동욱 찍어내기까지 하며 무리수를 둔 이유다.

그런데 역설이게도 이런 대응이 국가기관 내부에 연달은 공개 항명과 균열을 냈다. 특히 가장 중앙집권적인 특권우파 집단 검찰에서 균열이 일어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편을 들고 나선 것도 시사적이다. 그렇게 ‘반인권위원회’라고 욕먹더니 말이다.

유신스타일

이것은 박근혜의 ‘유신스타일’이 ‘유신체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와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이 여전히 건재하

기 때문이다.

내부 균열이 암투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연관 있다.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촛불운동은 비록 많은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우파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효과는 만들어 냈다.

그래서 박근혜는 우파의 기대와 달리 ‘한국의 대처’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 당장 박근혜는 협박에 굴하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 68퍼센트에게 한 방 먹었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12년 만에 민주당이 당선한 것, 6년 만에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도 힘 나는 소식이다.

물론 박근혜는 또 책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지체 없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복지 먹튀 속에 9월 하순 이후 박근혜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압도적 우위라던 경기 화성 보궐선거에 총력 지원 태세로 돌아섰다. 서청원이 당선하더라도 가까스로 이긴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당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

전교조처럼 우파 공세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노동자·민중이 늘어날수록, 우향우 정책이 지배계급 안에서도 무리수로 비춰지고 균열이 더 깊숙한 분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등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타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이미 이명박 정부 아래서 연립정부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추구하다가 독자적 투쟁과 요구마저 종속되는 실패를 겪었다.

당시 진보운동 지도자 다수는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위해 노동운동의 요구를 삭감하고 계급투쟁 방식을 회피하려 했다. 이것은 진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진정으로 왼쪽의 목소리를 대변할 세력이 약해지면서 박근혜의 우파 결집을 뒤흔들기는 더 어려워졌다. 결국 계급연합 ‘전략’은 선거에서마저 박근혜 당선을 막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게이트’ 촛불이 기회를 놓쳐 온 것도 민주당에 너무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시늉만 하다가 백기투항식으로 국회로 들어가 버렸고, 촛불은 뒤통수를 맞았다. ‘내란음모’ 사건 때는 새누리당과 손잡고 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분열로 약화된 진보정치 세력은 박근혜의 약점과 민주당의 무능을 전혀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연대에게 배제된 통합진보당도 나름의 “총체적 반박근혜 전선”론을 내놔다. <민중의 소리>는 사실에서 “민중의 대오가 결합하고, 야당과 종교계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1987년의 국본을 능가하는 한층 위력적인 민주수호 범국민연대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민중 운동의 구실을 더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친자본주의적인 민주당과의 계급연합 결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계급연합 방식으로는 반동적 방식으로 지배계급 일반의 이익을 지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세를 막기 힘들다. 1987년 당시에도 보수 야당들은 거리 항쟁의 급진성과 애써 거리를 두려 했다.

노동운동은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기의 몸통인 박근혜를 정면 겨냥하며 광범한 민중의 불만을 대변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총체적 정치공작에 맞서 강력 투쟁하면서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전교조 탄압 반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척결’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성의 진보당 후보가 5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금 우파한테 ‘종북 마녀사냥’은 지배자들의 균열을 막을 탈출구이자 무기인 것이다.

우파 마녀사냥에 조력자 구실이나 하는 민주당의 한심함도 여전하다.

이 상황에서 10월 22일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한주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등 해외 학자 대표단 5명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고 더러운 수법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는 1987년 군사정권이 몰러난 이후 제기된 적이 없다”면서 “냉전시대 남용으로 악명 높았던 반공 논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다시금 꺼내 들어 휘두르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성명에는 박노자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오언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 15개국의 한국학 학자 2백6명이 서명

했다(성명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노자 교수는 “국정원과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민주 시민들을 위한 보안기관과 군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재의 공관이 성명에 참여하려는 학자들에게 “이런 일 만들어 내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한국학 학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선 우파단체가 서재정 교수를 ‘종북’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용기를 내서 “한국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한국인들에게 연대를 표하기”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

우리로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 “힘들게 성취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에 굴하지 않고 해고자를 방어하고 대의를 지켰던 것처럼,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성지현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영국 정부가 [공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 주자 런던 금융가는 잔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여기에 IMF가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보탠다면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얼굴에 희심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도 알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전반적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요컨대 IMF는 영국 경제에 대해 더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하면서도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

그 주된 원인은 미 의회의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의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지면서 불거진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다.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에는 ‘남반구’의 “신흥 시장 경제들”[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 등이 있다. 특히 중국은 2008~09년의 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부가 대출 보증과 투자를 대규모 늘린 것이 있었고, 이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가속 폐담에서 발을 떼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이 주춤했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다.

반면 미국 정부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매달 8백50억 달러(9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 돈은 대부분 브라질과 터키 같은 나라들로 유입됐다. 그 나라들의 경기활황에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말이다.

올해 여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조만간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양적완화가 축소된 것처럼 금리가 오르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는 자본유출이 일어났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세계경제에서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침체하고 있다. IMF의 바램은 선진국의 성장률이 한층 높아져 이를 상쇄하는 것이지만 이 기대의 실현은 매우 요원하다.

실감감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최근 “통화 행동주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울프의 이 표현은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일본, 영국, 유로존에서 추진된 통화량 증가를 가리킨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다면 이런 통화 행동주의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실감감이다. 2013년 2분기에는 국내총생산 상위 6개국 중 오직 두 나라, 미국과 독일만이 5년 전 위기 이전에 견지 경제가 성장했다. 미국 경제 규모는 당시보다 5퍼센트, 독일의 규모는 2퍼센트 늘어났다. 프랑스 경제 규모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왔으며 영국은 약 3퍼센트 축소됐다. 위기에 휘청대는 이탈리아 경제는 9퍼센트나 축소됐다.

“공격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작았다는 것은 비록 금융부문이 회복되고, 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민간 부채는 줄었지만 이 경제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준다.

“이런 약점이 조만간 사라지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돈을 찍어 낸 것과 다름없는 전자적 거래들(양적 완화)은 경제 붕괴를 막았을지 모르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상승 국면에 들어서도록 하지는 못했다.

유로존에서 더 취약한 지역들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지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소식으로는 아일랜드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용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에서 부활의 신호가 가장 강력한 곳은 주택시장과 주식 시장이다. 즉, 금융투기의 동력이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10월 11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어느 특집기사의 제목은 “런던 금융가는 다시 안도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였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모기지 승인 건수는 61만 건이지만 2006년에는 1백40만 건에 달했다. 시티오브런던[영국 금융 중심지]의 금융서비스 종사자의 수는 25만 5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1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올하는 로열메일 상장 이전까지 모두 50억 파운드를 겨우 넘어서는 53건의 기업 공개가 이뤄진 반면 2006년 정점에는 3백50억 파운드에 달하는 2백98건의 기업공개가 이뤄졌다.

선진국에서 자본주의가 회복을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75호
번역 천형석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군비 경쟁을 촉발할 한국의 MD 참여 한국 공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험 발사.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쓰일 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1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SM-3(스탠드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SM-3와 THAAD 모두 미국 MD의 핵심 무기들이다. 이런 무기들의 도입이 한국의 미국 MD 편입을 의미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만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국방장관 김관진은 무기 도입 계획을 부인하면서 “KAMD가 MD로 편입되는 일은 확실히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관진 자신이 14일 “다층 [미사일]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는 KAMD는 북한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해 하층(고도 10~30km)에서만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중층과 상층(고도 1백km 이상)에서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을 갖추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MD 참여를 촉구하며 한·미·일이 함께 상층에서 중국·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자고 제안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중·상층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을 명백한 미국 MD로의 편입으로 간주해 왔다.”(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사실,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MD 구축에 협력해 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의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레이더 등이 한국에 배치됐다.

이명박 때부터 한국은 미국의 해상 MD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MD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미사일 발사 탐지·추적 정보도 미국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은 한국을 MD 협력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흐름은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오바마는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박근혜의 KAMD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지역 MD 편입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정옥식). 최근 박근혜가 미국에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 편입을 거래한다는 얘기도 파다

하다.

미국의 MD 구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총알로 총알 맞추기”식의 MD 기술을 미국이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은 북한·이란 같은 “불량국가” 때문에 MD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우기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중국 같은 강대국들을 겨냥해 핵과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자국 패권을 굳히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

지난 6월에 나온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통합된 MD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압박해 왔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 것이다. 이는 모두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노력의 일부다.

‘MD 협력 국가’와 딜레마

박근혜는 미국의 지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은 한사코 피하려 했다. 남한 강경 우익도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MD에 필요한 X밴드 레이더의 백령도 배치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0월 16일)

그러나 박근혜는 행동에서는 명백히 MD 편입을 향해 한 발짝 내딛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급속히 부상했어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이다. 한국 지

배자들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깝더라도 미국과 맺은 기존의 군사동맹을 포기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 위협’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이 남한의 안보 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안팎에서 한반도 유사시 배후기지 구실을 해 줄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MD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확히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바다.

한국이 MD에 편입될수록 엄청난 돈을 군비에 써야 할 것이다. 복지 공약은 돈이 없다고 다 뒤집으면서 말이다. 미국은 경제 위기로 군비를 줄여야 하는 처지여서 동맹국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예컨대 SM-3는 이지스함 3척에 탑재하는 데만 약 2조 원이 든다. THAAD는 초기 구축 비용에만 약 4조 원(2개 포대)을 써야 한다.

‘다층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강정에 있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오가는 꼴을 보게 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무엇보다 중국도 군비를 더욱 늘리면서 맞대응에 나설 것이 분명하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긴장과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다. MD 구축에 대응해,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릴 게 뻔한다. 즉,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이 더욱 위험해지는 것이다. 일본 핵무장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 돈이 들고 한반도와 그 주변을 더 긴장케 하는 MD를 한반도에 들여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MD 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하고, 이미 국내에 들어온 MD 시설들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김영익

돈 없어서 복지 못 한다고?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강동훈

조선 노동자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꽤 넓게 퍼져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조차 올해 1.8퍼센트 임금 인상안이 51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돼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2012년 2퍼센트, 2013년 1.6퍼센트밖에 인상이 안 돼,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꾸준히 삭감돼 왔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2012년 10~11월에 만 50세 이상 관리직 2천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고용 불안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고 한다.

또, [표1]에서 보듯, 현대중공업 조선 부문 기능직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중이 2008년 위기 시작 때 55퍼센트에서 2012년에 69퍼센트로 급등했다.

물론 2012년 하청 노동자 비중은 삼성·대우 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삼성·대우가 위기 전부터 하청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최근에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같은 기간에 삼성·대우에서 직고용 노동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직고용 노동자 수가 2천 명 넘게 줄었고 하청 노동자 수는 4천 명 넘게 늘었다는 점도 위기감을 부추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한 현대중공업 정

병모 위원장의 “정규직 퇴직시 퇴직자의 1.5배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채용” 공약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꽤 큰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과 노동자들의 처지 악화는 불안감과 불만을 키워, 좌파 노조 지도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업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측도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현대중공업 등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활동가들이 지금부터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야만 사측을 굴복시키고,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표1]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기능직 노동자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1,208	20,606	20,437	18,005	21,585	23,072
직명	9,490	9,217	8,825	7,243	7,261	7,112
하청 (비율)	11,718 (55%)	11,389 (55%)	11,612 (57%)	10,762 (60%)	14,324 (66%)	15,960 (69%)

자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2013》에서 재구성.

[표2] 전 세계 신조선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단위: 백만CGT)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주량	93.6	54.4	16.7	45.4	33.7	21.3
건조량	35.1	43.0	44.8	52.2	50.4	45.3
수주잔량	189.8	208.1	170.9	152.1	129.4	92.9

자료: Clarkson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2010년 2758에서 2012년 920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9월 말에 1109로 약간 올랐다.

운임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3년 전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인 것이다.([그림1])

계속되는 해운업 불황으로 한국의 주요 해운업체들도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3년째 적자 행진을 하고 있고, 현대상선도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누적 적자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한진해운의 부채 비율은 2008년 1백56퍼센트에서 올해 1분기 7백75퍼센트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현대상선도 1백90퍼센트에서 8백51퍼센트로 급등했다. 국내 해운업계 순위 3·4위인 STX팬오션과 대한해운은 법정관리 중이다.

그런데 운임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자, 세계 주요 해운 회사들은 비용의 20퍼센트에 이르는 연료비를 줄이려고 효율이 높은 최신 선박의 비중을 높이는 데 돈을 쓰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해운

회사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 것도 선박 교체를 부추기고 있다.

근래 선박 건조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11일에 영국의 국제적인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전 세계 조선소의 수주량은 3천22만 CGT(Compensated Gross Tonnage·수정 환산톤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8백58만 CGT보다 1천1백64만 CGT(62.6퍼센트) 증가했다.([표2])

한국 조선소들도 9월 말까지 1천 87만 CGT를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백76만 CGT에 비해 5백11만 CGT(88.7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 가격이 여전히 낮아 조선업계는 고통받고 있다.

‘조선 빅3’ 상황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Clarkson Newbuilding Price Index, 이하 신조선가 지수)는 새로 만드는 선박에 대한 가격을 수치화해 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2008년 조선업 호황기에 190을 웃돌았던 신조선가 지수는 경제 위기 여파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올해 5월 126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6월 127, 7월 128, 8월 129로 조금씩 상승했고 결국 올 10월 들어 130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조선업도 바닥을 친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조선가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8월에 견주면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다.([그림2])

실제로 올해 9월에 신조선가가 올랐음에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백3만 CGT로 8월 4백29만 CGT와 비교해 절반밖에 안 됐다.

한국에서도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수주량은 2009년에 급감했고, 2012년에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건조 중이거나 앞으로 건조할 선박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수주잔량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2008년에는 3년치 안팎의 수주잔량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1년 6개월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대형 조선사는 통상 2년치 이상의 수주잔량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수주잔량 감소, 2012년 수주 실적 부진 등에 대응해, ‘조선 빅3’는 2013년 선박 수주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저가 수주를 낳았고, 이것은 2~3년 뒤인 선박 인도 시점에 조선업체 수익성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올해 5월에 수주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은 1척당 가격이 1억 4천만 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비슷한 크기의 선박보다 4천만 달러나 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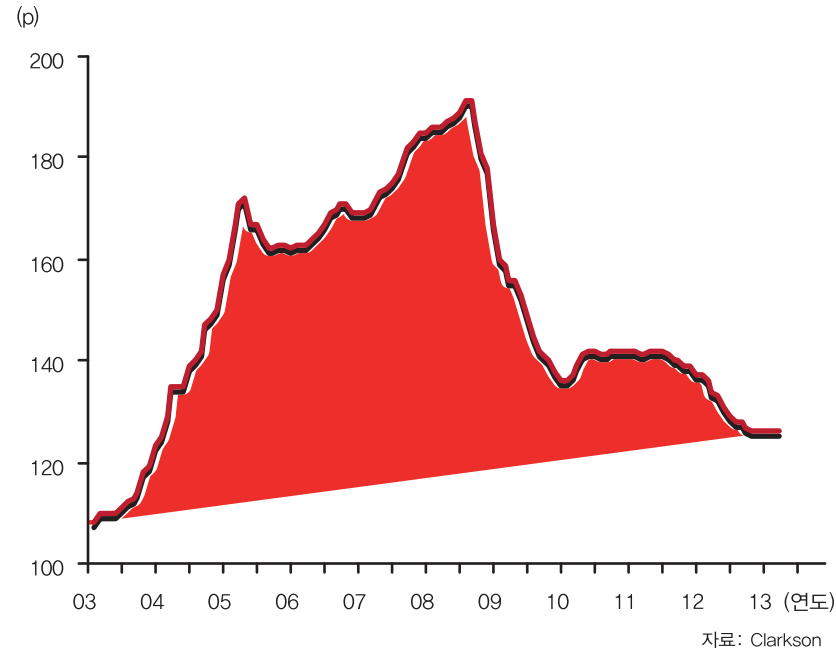
결국, 조선업의 계속되는 위기와 침체는 구조조정과 이에 맞선 저항 등 치열한 쟁투를 예견케 한다.

[그림1] 발틱운임지수(BDI)



자료: Clarkson

[그림2]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CNPI)



자료: Clarkson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 1990년 ‘굴리앗 투쟁’

현대중공업 활동가의 목소리

“조합원들이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의견그룹 ‘전진하는 노동자회’ 활동가 설남중 동지가 이번 선거에 대해 말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09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 인상도 형편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죽도록 일만 했는데 임금은 거의 동결된 것

입니다.

산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합원이 산재를 당해 [기존의 친사측] 노조에 신고하면 5분 안에 회사 관리자가 먼저 찾아와서 회유합니다. 노조가 말을 안 해 주면 회사가 알 수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산재를 당해도 노조에 안 갑니다.

민주주의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다. 기표한 표를 투표함에 넣을 때 보이

게 넣어야 하고 관리자들이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지켜봅니다. 사측 관리자가 투표소에 몰래 카메라가 있으니 잘라라고 협박했다는 제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서장이 선거철만 되면 매일 조합원들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안 갈 수도 없어요. 안 가면 찍혀서 여기저기 불러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나 최근 조합원들의 느낌은 전과 달랐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바뀌야 한다”고 입을 떼는 조합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관리자들 눈치 봐서 그런 말을 못 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는 그간 쌓인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회사가 억눌러 왔지만 이제는 조합원들이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김지태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파시즘 —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극우와 파시즘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그리스와 프랑스다.

그리스에서는 황금새벽당이 2012년 6월 총선에서 6.9퍼센트를 득표하며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FN)이 2012년 대선에서 사상 최다인 18퍼센트를 득표했다. 최근에는 브리뇰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도 극우·파시즘 정당들이 각종 선거에서 10퍼센트 이상 득표하고 있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시즘 정당이 약진하리라는 예측도 많다. 이런 현상은 1930년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파시즘의 존재감은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표 사례가 노르웨이의 아네르스 브레이비크다. 브레이비크는 2011년에 총을 난사해 70명 이상을 살해한 파시스트다. 이 살인마는 “인종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럽의 극우와 파시스트는 대체로 네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① 인종차별적 극우 포퓰리즘 정당.

영국의 영국독립당, 스위스의 국민당, 네덜란드의 자유당이 있다. 당원 중에 파시스트가 있지만 이 정당들은 파시즘 정당은 아니다. 이 정당들은 민주적 제도를 통해 인종차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제를 관철시키려 한다.

② 유로파시즘.

프랑스의 FN, 스웨덴의 민주당, 영국의 영국국민당(BNP)이 있다. 이 정당들은 단순 우파 정당을 자처하지만 그 핵심에는 파시스트가 있다.

③ 공공연한 파시스트 정당.

그리스의 황금새벽당과 헝가리의 조빅당(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이 있다. 이 정당들은 파시즘 사상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이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한편 폭력 집단과 준군사조직을 운영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고 이주민과 좌파에 테러를 가한다. 즉, 파시스트 조직의 “이중 전략”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④ 거리 운동 조직.

동유럽 여러 나라에는 인종차별적 극우 민족주의 폭력 집단들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당이 대표적이다. 이 조직들은 로마인*과 유대인을 겨냥한 폭행을 저지른다. 영국의 영국수호동맹(BDL)도 여기에 속한다.

극우·파시즘이 성장하는 일차적 배

경은 경제 위기다. 예를 들어, 현재 그리스는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에 견줘 20퍼센트나 감소했다. 실업률은 28퍼센트에 이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60퍼센트에 달한다. 충격적이게도 15~24세의 그리스 청소년 중 3분의 2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속에 기성 주류 정당들에 대한 환멸이 커졌다. 각국 정부가 추진한 긴축 정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를 낳았고, 극우와 파시즘의 성장은 정치적 양극화의 오른쪽 모습을 보여 준다.

국가와 주류 정당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화한 것도 극우·파시즘 성장에 한몫했다.

원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 지배자들은 극우·파시즘과 거리를 뒀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유럽 각국 지배자들은 난민·이주민을 점점 더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무슬림이 새로운 “내부의 적”으로 지목됐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프랑스는 공공시설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을 법으로 금지한다.

무슬림 외에도 로마인과 유대인도 박해를 당한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에서는 ‘토착’ 슬로바키아인과 로마인의 거주지를 분리하는 장벽이 세워졌다. 헝가리 정부는 로마인 아동만 따로 다니는 학교를 지으려 한다. 얼마 전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로마인들을 대거 추방했다.

그리스에서는 ‘혈통이 다르다’며 이민자 아동에게는 아예 국적을 주지 않으려

이중 전략

거리에서 소수 민족과 좌파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합법’ 정당을 표방하며 주류 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파시스트 당의 전략.

로마인

유럽(주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거주하는 소수 인종으로 예전에는 ‘집사’라고 불렸다. ‘집사’라는 용어는 요즘에는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시리자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으로 현재 제1야당.

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아동은 18세가 되면 불법 체류 신세가 된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극우·파시즘 세력이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FN의 후보 마린 르펜은 우파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조하는 것에 ‘내가 원조다’ 하며 대응했다.

이 점에서 프랑스 좌파들이 인종차별적인 이슬람 복장 착용 금지법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심지어 동조해 온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내가 원조’

그렇다고 유럽 정치가 우경화 일변도를 걷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오른쪽으로는 극우·파시즘이 성장했지만 왼쪽으로는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더 정확하게는 좌파 개혁주의)가 성장했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 지지율이 그 전의 7배가 됐다.

더 중요하게는 극우·파시즘에 맞서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파시즘 정당 BNP는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석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대거 배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반파시즘 활동가와 사회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건설한 결과 BNP는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했고, 지난해에는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더 중요하게는 파시스트들의 거리 시위도 훨씬 더 큰 반파시즘 시위에 가로막혀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일쑤였다.

유럽 극우·파시즘 정당들의 지지율 변화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에 보복하려는 지배자들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세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된 사람들은 SEK가 발행하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기자 카테리나 소이두, 발행인 타소스 아나스타시아테스,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다.

이주민 아동들에게 그리스 국적을 주려는 안 된다고 선동한 황금새벽당의 행태를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 파시스트들이 그런 선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 변호사를 고용했던 황금새벽당의 의원들은 범죄 조직 결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금새벽당 당원들이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유명 힙합 가수 파블로스 파이스를 무참히 살해한 이후, 파업을 동반한 대규모 항의 행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 항의 운동의 압력으로 그동안 파시스트를 변호하던 그리스 정부는 황금새벽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역” 바깥에 있는 ‘극단적’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정부는 “[파시즘의] 반대편 극단”이라며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을 이끌어 온 연대체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소집자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를 기소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신해 온 이주민이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인 나지르 가세미에게는 조작된 “밀수” 혐

의를 덧씌워 7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아니라 다른 수많은 반파시즘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 황금새벽당 측 변호사가 SEK 당원 세 명을 고소한 것도 이런 전반적 공격의 일부다.

이번에 고소당한 SEK 당원들도 긴축과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 늘 앞장서 왔다.

그리스 지배자들은 강력한 반파시즘 운동에 밀려 물러섰지만, 운동이 더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싶어 한다. 긴축에 맞선 투쟁에서 그리스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도록 노력한 사회주

의자들과, 거대한 운동을 일궈 낸 반파시즘 활동가들을 겨냥한 지배자들의 공격은 명백한 보복 행위다.

SEK는 황금새벽당의 지도적 당원들이 체포당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긴축 정책을 통해 빈곤이 확산되는 길을 닦았고, 인종차별이 판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며] … 학교와 병원을 폐쇄하고 이주민수용소를 연 … 정부는 물러나야 할

의회민주주의에 환상이 있어서가 아니다. 파시즘이 집권하면 의회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물(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같은 노동자 조직들)이 파괴되고, 그것은 노동계급 전체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 파시즘 성장의 뿌리는 자본주의 위기와 야만이다.파시즘 자체와 자본주의 둘 다에 맞서는 투쟁이 사활적인 이유다.

그런데 자본주의 위기·모순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르주아 정당·정부는 파시즘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이 때문에 자본가 계급 일부까지 포함하는 인민전선(계급연합)으로는 파시즘에 맞서기 어렵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가 파시즘을 분석하며 주장했듯이, 개혁주의적이든 혁명적이든 모든 노동계급을 포괄하는 공동전선으로 파시즘에 맞설 필요가 있다.

차승일

때”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처럼 긴축과 야만을 조장한 정부야말로 물러나야 한다! 활동가들은 죄가 없다!

김준호

* 그리스 정부의 사회주의자 탄압에 반대하시는 분은 ergatik@otenet.gr로 연대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프랑스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폭발하다

데이브 수엘

정부의 인종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에 프랑스 학생들이 도전했다.

10월 중순, 정부가 또래 청소년 둘을 강제추방한 것에 분노한 학생 수천 명이 중등학교(콜레즈와 리세)를 점거하고 거리에서 행진한 것이다.

하치 하차투리안(19)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비행기에 실려 아르메니아로 추방됐다. 그의 부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르메니아를 떠났고, 그는 부모를 따라 프랑스에 왔다.

로마인(‘집시’는 이들을 경멸조로 부르는 호칭이다)인 레오나르다 디브라니(15)는 통학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코소보로 추방됐다.

레오나르다는 코소보에 가 본 적이 전혀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당연히 코소보 말도 할 줄 모른다.

10월 17일, 이에 항의해서 중등학교 수십 곳에서 항의 시위와 점거 투쟁이 시작됐고, 7천 명이 파리 시내를 행진했다.

사를마뉴 리세 학생들은 “하치과 레오나르다를 데려와라. 그들이 살 곳은 여기

다” 하고 외쳤다.

콜레즈 학생회(UNIL)에 속한 이반 드 맹통은 “학생은 이주허가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했다.

콜레즈의 다른 학생인 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삶의 터전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치과 레오나르다 추방을 보며 오랫동안 참아 온 분노가 터졌어요.”

엠마(15)는 “이런 조건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할 수 없어요” 하고 말했다. 자신의 교사 몇 명도 행진에 참여했다고 했다.

허가증

프랑스대학생연합(UNEF)은 11월 5일 전국 시위를 호소했다. UNEF는 레오나르다와 아치의 귀환과 학생 추방 금지를 요구한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로마인 1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우파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추방 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당 올랑드 정부 역시 이 정책을 지속했다.

올랑드는 인기가 떨어지자 내부부 장관 마누엘 발스를 통해 우파의 인종차별 정책을 강화했다.

지난달 발스는 로마인들의 “생활양식이 [프랑스인들과] 충돌한다”고도 발언했다.

시위대는 그의 사임을 촉구해 왔다. 레오나르다 추방 이후에는 정부 안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 장관 빈센트 베일롱은 “학교는 신성불가침”이라며 일과시간 중 추방을 단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올랑드는 마지못해 개입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부모를 코소보에 두고 온다는 조건으로 레오나르다의 귀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오나르다 본인이 이 제안을 즉각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당 대표 아흐렘 데시호도 이를 비판했다.

지난 몇 년간 프랑스에서는 우파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해 왔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두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번 시위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선동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사진 출처 Philippe Soussan (플리커)

“우리 친구를 내보라” 10월 17일 추방된 학생들을 귀환시키라고 요구하며 파리 시내를 행진하는 프랑스 학생 시위대.

로마인(집시)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그리스에서] 로마인(‘집시’) 가정에서 발견된 한 급발의 소녀 사진이 유럽 언론을 도배했다. 언론은 그 로마인들이 소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녀가 어떻게 로마인 가족과 함께 있게 됐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로마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적 공포를 부추기는 것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이런 유언비어는 백인, 특히 백인 아이와 여성들이 소수 인종한테 ‘당한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부추긴다.

이런 유언비어는 시대와 나라마다 그 대상이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주로 흑인 노예가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20세기 전반기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비슷한 유언비어에 시달렸다. 오늘날 서방에서는 무슬림을 ‘문명을 위협하는 자들’로 치부하는 일이 반복된다.

유럽에서는 로마인이 위협적이라며 곳곳에서 이들을 단속한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는 로마인을 걸인·무법자인 것처럼 묘사한다. 이런 편견을 부추겨 그들을 추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빈민촌

저들은 대도시 주변 빈민촌에 사는 로마인들이 ‘범죄 쓰나미’를 일으킨다고도 말한다.

유럽 전역에서 로마인은 각종 차별과 정부의 억압과 폭력에 시달린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로마인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는 장벽까지 짓고 있다.

열마 전까지 1만 명 이상을 추방한 프랑스에서는 15세 로마인 소녀가 추방된 것을 계기로 항의 시위가 폭발했다.

아무리 정치인과 언론들이 인종차별

적 악선동을 퍼부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방어 운동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정치인들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자신들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한다.

정치인들은 “생계가 막막한 지금, 사람들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임금을 끌어내리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사장들이고,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경제 위기 때문이지 전쟁과 가난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사장과 정치인들이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노력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온 모든 이주민들을 환영한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76호 / 번역 김종환



사진 출처 Stop The Shipment

최루탄은 비살상무기라고? 최루탄에 목숨을 잃은 14세 바레인 소년.

방위사업청은 아랍 혁명 파괴용 최루탄 수출 금지하라!

김종환

2011년 2월 이후 바레인에서는 가혹한 탄압에도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루탄은 바레인 왕정이 가장 애호하는 시위 진압 도구다. 2년 넘도록 하루 평균 2천 개에 달하는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시위대 머리를 조준해 발사하고, 거리뿐 아니라 집이나 교회 등 밀폐된 공간에도 발사한다.

이처럼 악랄하게 최루탄을 사용한 결과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최루탄이 몸에 박히거나 그 연기에 질식해 39명이 목숨을 잃었다(인권을 위한 의사회). 바레인 국왕이 직접 임명한 조사 위원회조차 10명이 최루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바레인 왕정의 뒤를 따르는 미국마저 2012년 5월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금지했다.

그런데 인권단체 ‘바레인 위치’는 바레인에서 사용된 최루탄 중 한국산(대광화공 생산, CNO테크 수출)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15세 소년의 얼굴을 직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최루탄 역시 한국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사로 지목된 대광화공은 “2011~12년 바레인에 최루탄 1백만 개를 수출했다”며 수출 사실을 숨기

도 않았다.

최근 바레인 인구(약 1백20만 명)보다도 많은 최루탄 1백60만 개를 수입하려는 바레인 왕정의 계약 문건이 폭로됐다. 한국 방위사업청 역시 ‘한 업체가 최루탄 수출 허가를 문의했다’고 인정했다. ‘바레인 위치’는 한국 정부가 최루탄 수출을 금지하도록 해 달라고 국제 사회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최루탄 수출 허가를 관장하는 방위사업청 등에 공문을 보내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 역시 “미국 정부는 한국과 바레인 정부의 최루탄 거래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국산 최루탄이 6월 터키 게지 공원에서 있었던 시위를 진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민주노총 등이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당 업체들은 웹사이트에 최루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시위대 사진을 올려 놓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아랍 혁명을 짓밟는 데 사용될 이런 최루탄 생산·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탄원 서명(한국글)
<http://amnesty.or.kr/ai-action/7534/>

탄압과 외면에도 꺾이지 않는 바레인 민중 저항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대표적인 중동 친미왕정이다. 2011년 2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 여파 속에 바레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군대를 보내 시위대를 살해했다. 바레인 왕정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불뚝이 될까 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교사들이 반정부 시위에 앞장섰고 그 때문에 집중적으로 탄압받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이나 시험 시간에 진행되는 일은 다반사다. 경찰서에 끌려가 구타는 물론이고 여학생들은 강간 협박까지 동반한 고문을 당했다. 왕정은 13세 학생을 한 달 가까이 투옥하고, 15세와 16세 학생에게는 테러 혐의를 적용해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가뒀다.

또한 6~16세 학생들이 탄 통학버스를 통째로 연행하는가 하면, 연행 학우 석방을 요구하며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학교에 최루탄을 쏘며 진입하기도 했다.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여덟 살 초등학생까지 “학교 내규에 따라” 구타하고 징학 처분했다. 또한 졸업 면접 제도를 도입해 국가관과 시위 참여 여부를 묻고 그 여부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에 함께 나섰고 그 때문에 탄압받고 있다. 교사들은 2011년 시위대 살인진압에 항의해 5천 명가량이 나흘 동안 파업을 벌여 군대를 거리에서 몰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왕정은 교사들을 반정부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바레인 교사협의회(법으로 금지된 교사 노조를 대신하는 기구)를 해산시켰다.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사재판에 회부해 고문하고 징역에 처했다. 다른 교사들 역시 수업과 시험 감독 중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당했고, 여교사들은 강간 위협을 당했다. 해고자만 1백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바레인을 18개 위원국 중 한 곳으로 임명했으며, 유네스코 국제교육국은 아예 부회장직을 맡기기까지 했다. 사실상 바레인 왕정의 탄압을 대놓고 옹호한 것이다. 주류 언론 역시 이런 탄압과 역겨운 동조 행위를 은폐한다.

한 이집트 혁명가는 “이집트 혁명은 아랍의 친미왕정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청난 탄압과 국제적 외면 속에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바레인 민중이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요금 인하? 민간 매각 금지? 거짓말!

KTX·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 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에 배당하고, 해당 지분의 매각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런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출된 이 사회의 '매각 의결 기준 강화' 조처는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이미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이런 검토의견을 받았는데도, 모른 척 논 잡고 가능하다고 말해 온 것이다.

본지가 일찍이 보도했듯, 회사 정관에 지분 매각 금지 조항을 담은 방안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본지 112호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참조) 민주당 신기남 의원의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인력 지원을 받아 올해 5월까지 '철도 민영화 비밀TF'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인력 파견은 불법인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밑바탕이 된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구체적 내용도 폭로되기 시작했다. 3백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전면적 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 구조개편안과 이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수의 민간 기업 운영"을 전제로 한 이 보고서에 바탕해, 2017년까지 지주회사 전환,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설노선·적자선 민영화, 물류·차량·유지보수 분리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민영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수서발 KTX에 대해서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 회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며, "민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민영화 논란·갈등을 피하려고 '철도공사 출자회사'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착안해 철도공사 출자 법인(주식회사)을 우선 설립하고, 이후 사기업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수서발 KTX 출자회사

그런데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점은, 자금과 같은 형태의 수서발 KTX 법인이 큰 틀에서 '민간 운영'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한 것이다. 즉, 정부가 이 회사에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힌 것은 사기에 불과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와 같은 것으로, 한 이 보고서에 바탕해, 2017년까지 지주회사 전환,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설노선·적자선 민영화, 물류·차량·유지보수 분리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민영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수서발 KTX에 대해서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 회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며, "민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민영화 논란·갈등을 피하려고 '철도공사 출자회사' 방안도 제안했다.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면,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가 축소·폐지되고, 요금도 인상될 것이 뻔하다. 또 "효율화"

를 명목으로 열차를 감축하거나 역을 무인화·폐쇄할 수 있다. 사측은 이미 올해 7월 전해선 열차운행을 1일 13회에서 4회로 감축한 바 있다.

사기업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리도 없다.

정부는, 만약 적자선을 사겠다는 사기업이 없으면 운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아예 노선이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일본 철도 민영화 과정에서 적자 지방선 폐쇄가 잇따랐다.

따라서 적자선 민영화를 막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철도노조 지방본부와 사회노동단체들이 민영화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선 등 지역에서는 새롭게 민영화 저지 대책위도 건설되고 있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면,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가 축소·폐지되고, 요금도 인상될 것이 뻔하다. 또 "효율화"

성지현



민영화



저항의 중요 축 현실화되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박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고는 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직위해제'부터 하고 사후에 정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 규명 전에 처벌부터 하는 악랄한 조치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기강 확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근 철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의 성명대와 한 통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받지 않았다.

사측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우기지만, 노동자들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임금 삭감과 파괴감·수치심 등을 겪고 있다. 최연혜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기관사 네 명과 열차승무원 한 명이 직위해제 됐다.

구로 열차승무원은 역사 내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아 정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기계 조작창이 무정차 통과와 원인이었는데도 말이다.

일선 현장엔 '안전지도사'들이 상주하며 노동자들을 감시·통제까지 하고 있다. 김학경 철도노조 운수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승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열차 승무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까지 하고 있다. 근무 중에 음주해 개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벌백계식 처벌과 현장 통제는 안전에 도움이 되는커녕 해롭다.

엄벌주의는 잦은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고 개인의 실수를 파헤치는 데 급급하도록 만든다. 이는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기만 할 것이다. 실제로 허준영 사장직년부터 강화돼 온 중징계와 현장 통제는 사고를 늘렸고 노동자들을 자살로 내몰기까지 했다.

일벌백계

사실 2005년 철도공사 전환 이래 추진돼 온 온갖 시장화 조치들 — 1인 승무 도입, 외주화 확대, 정비 주기 확대 등 — 이 바로 사고의 주범이다. 올해 8월 대구역 열차 사고도 2008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위험한 신호기를 개선하지 않고, 무리한 인력 감축을 시도한 탓이었다.

정부와 공사 측은 지난 5년 동안 5천 1백15명 인력 감축,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부족 인력 미충원 등으로 위험을 키워 왔다.

그래서 2011년에 철도공사가 구성한 철도안전위원회조차 '인력 효율화'의 한

이정원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지난 7월 중앙선과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영 저지 이후, 철도공사 측은 다시 이를 밀어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 혹자 경영을 다짐하며 "강력한 자구 노력" 의지를 밝힌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1인 승무라는 기관사 감축 시도에 나설 것도 자명해 보인다.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시 대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이는 이미 여러 열차 사고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에 따르면, 지금 철도공사 측이 1인 승무 도입을 추진하는 중앙선의 경우, 산악지대와 곡선·터널이 많고 하나의 선로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사고가 한 번 나면 대령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열차에서도 "여객열차와 달리 열차 승무원도 없는데 차량은 20~30량으로 여객열차보다 길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철도공사 측이 '안전 제일'을 외치면서 1인 승무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1인 승무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7월에 그랬던 것처럼, 철도 노동자들은 이번 시범운영 시도도 좌절시켜야 한다. 사장 최연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행하며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탄압에 맞서 노조 전체 차원의 대응과 방어가 필요하다.

이정원

요금 인상, 대형 참사, 인력 감축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특별 페이지
<http://left21.com/nosale>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KTX, ITX에서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요금 인상을 가능토록 하고, 수요·시간 대별 차등 요금도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요금 인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요금 인상체계, 선로사용료 제도 정비 등은 고수익을 노리고 수서발 KTX에 투자하려는 자본(사기업·연기금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더구나 회계 분리는 흑자노선에서 생

긴 수익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지원했던 '교차보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적자선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등급별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KTX, ITX에서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요금 인상을 가능토록 하고, 수요·시간 대별 차등 요금도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요금 인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요금 인상체계, 선로사용료 제도 정비 등은 고수익을 노리고 수서발 KTX에 투자하려는 자본(사기업·연기금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민간 매각', '민영화'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영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당장 이번 국회에서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리 멀지 않은 내년 초경에 국회 통과를 노리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등은 지난 1년 반 넘게 수서발 KTX 민영화의 폐해를 꾸준히 폭로해 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번 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낱알이 폭로하며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박설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으로 강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역대 연봉을 받는 일부 의사들의 임금은 2.8퍼센트씩 인상하면서 노동자들 임금만 동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팬찮다고 말할 형편이 안 된다.

겉보기에 어지간한 임금은 기본급보다 많은 수당 때문이다. 24시간 돌아다니는 대학병원 노동자들은 거의 강제로 휴일·야간·연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수당도 충분치 않다.

연장근무는 수당이 없기 일쑤고 야간 근무도 한 달에 최대 9일까지 한다. 응급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뛰쳐나가야 하는 '대기' 시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병원은 확장하면서 인력은 충원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주 5일제는 커녕 토요일 진료는 점점 늘었고, 야간 수술진수는 최근 3년 동안 65퍼센트나 늘었다. 비정규직이 1천 명이 넘는다.



사건(사건)

돈벌이에 열인이 된 정부·병원에 맞선 투쟁에 승리.

병원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감면제도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 그동안 퇴직 의사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줬던 병원 측이 노동자들만 쥐어짜는 것이다.

유급휴일을 줄이고 연월차 휴가 수당도 3분의 1이나 삭감하려 한다. 치솟는 월세, 전세값과 물가인상 속에

말이다. 대부분 의사가 선택진료로 지정되어 환자들은 옮겨 겨자 먹기 식으로 일반진료비의 20~1백 퍼센트를 추가로 지불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이 선택진료비로만 무려 4천50억 원을 벌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공공의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 투쟁은 지지와 연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정호중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케이방 방송 티브로드 파업은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투쟁은 지난 몇 년간 확대된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잇고 있다. 이번 파업을 이끈 이시우 티브로드지부 지부장에게 투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었다.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7개월가량을 현장에서 투쟁하고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의 성과로, 노동시간을 월 35시간으로 대폭 줄였고,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임금도 대폭 인상시켰어요.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과 사무실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어요.

이런 내용으로 노조는 티브로드의 하청업체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와 협약을 맺었고, 원청인 티브로드에는 이 협약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어요.

특히 조합원이 있던 센터에서는 조합원이 늘고 있어요.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측의 쥐어짜기, 강압, 억압에 울분을 터뜨려 투쟁에 나섰어요. 그러다보니 단결력도 높았고요. 생활고 등의 문제로 파업이 길어지는 것에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티브로드 본사를 점거했어요. 이를 통해 양보를 끌어냈다는 것에 조합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많은 조합원들과 연대 온 동지들

에게 잘했다는 격려와 지지를 받았어요. 점거 농성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합원이 있는 센터 15곳 중 3곳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 다시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티브로드 본사와 사업부에 요구하고 있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재의 열악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면 무관심으로 비판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중요해요. 그리고 단호한 마음가짐과 투쟁 의지를 갖고 싸워야만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미 유영규

역사에서 배우기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을 당한 조봉암과 진보당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는 이승만 정권이 벌인 ‘진보당 마녀 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는 “조봉암의 사형은 정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보당 사건’은 억압적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미국은 이승만을 꼭두각시 정부의 수반으로 낙점했다. 이승만은 제주 4·3 항쟁과 여순항쟁을 잔악한 학살로 진압해 그 피의 강물 위에 분단 정부를 세우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불순분자’들을 숙아 내기 시작했다. 일제 시기에 남북을 합해서 감옥에 투옥된 수는 1만 2천 명이었는데, 이승만 집권기에 3만 6천 명으로 늘었다. 죄수들은 대부분 좌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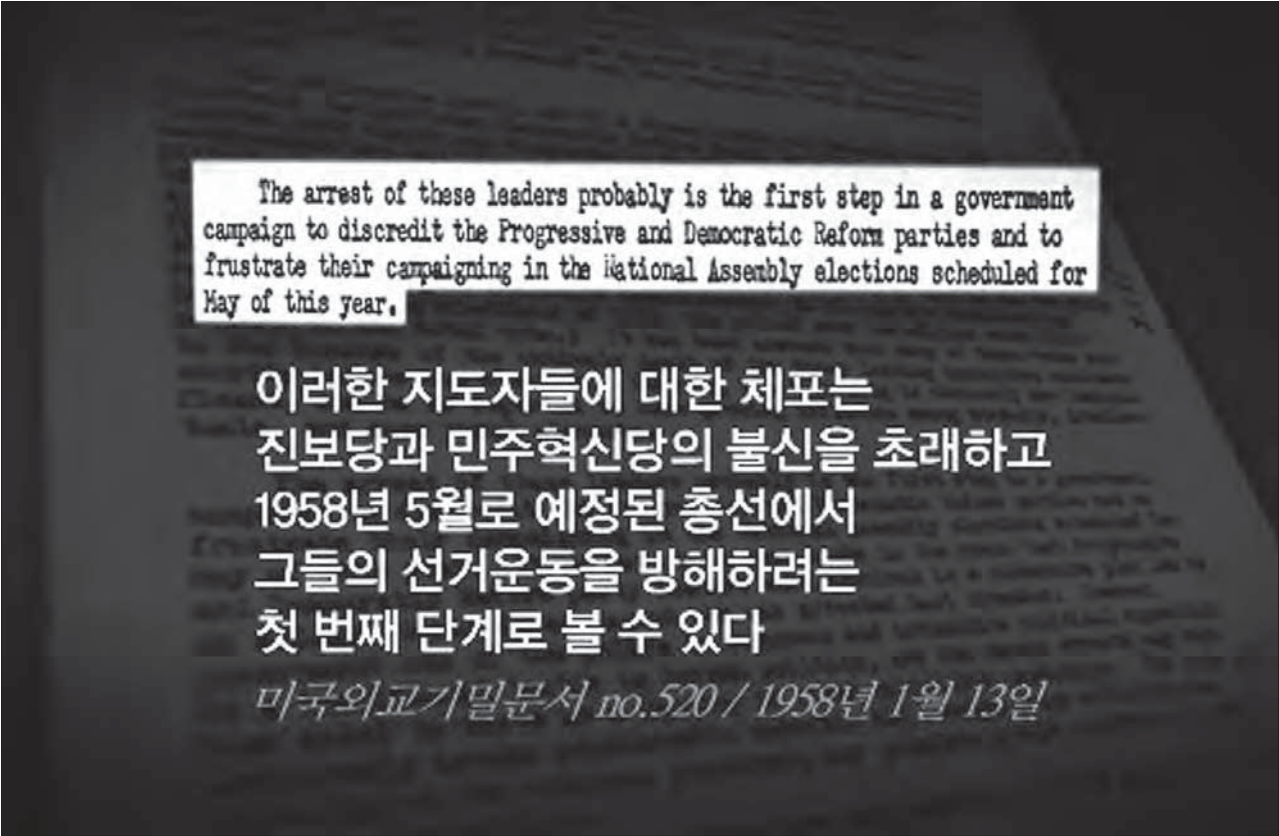
이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조봉암 등이 표방한 ‘혁신’은 민중의 변화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조봉암은 해방 이전 항일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자였는데, 해방 이후엔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삼았다.

특히 조봉암의 ‘진보당추진위원회’가 명령으로 삼은 평화통일은 동족상잔을 경험한 민중에게 대단히 큰 호소력을 가졌다. 이는 북진통일과 매카시즘을 선포하던 이승만에게는 불길한 신호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승만은 진보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조봉암 등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1951년 이승만은 ‘대남간첩단사건’을 조작해 신당 추진세력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1954년 조봉암이 5·20 총선에 출마하려 할 때, 선거사무차장 김성주는 밀실로 끌려가 고문 살해됐다.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것은 1956년 대선 때였다. 높은 실업률과 억압적 통치로 인해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스멀스멀 커지고 있었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된 이승만은 선거 내내 온갖 부정으로 ‘반칙왕’의 면모를 보여 줬다. 반면 조봉암의 진보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장면의 민주당이 내놓을 수 없는 공약들로 인기를 끌었다. 평화통일, 친일과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조봉암은 유권자의 23.8퍼센트, 2백15만 표를 획득하며 약진했다.

이후 1957년에는 한 달 걸려 한 번씩 간첩사건이 터졌는데, 그때마다 조봉암의 이름이 거론됐다. 조봉암이 다음 표적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진보당 마녀사냥을 보면 지금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떠오른다. 이승만 독재에 위협적이던 조봉암과 진보당도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을 당했다.



사사오입 개헌
1954년 집권당 자유당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해 의결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사건.

1958년 1월 12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단과 접선했던 혐의가 있고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으며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송치했다.

이후 신문들은 매일같이 ‘아님 말고’식 보도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조봉암 씨 김일성과 모종 내통?”, “거물 간첩 양명산과 접선” 등 조봉암 집에서 김일성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됐다니, 권총이

지금의 마녀사냥과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는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그 뒤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것이다.

발견됐다니 하는 기사들이 대서특필됐다.

재판 중에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등록 취소를 발표했다.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 방안을 주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엔 결의안은 평화통일이었는데도 말이다. 1심에서 조봉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반공청년’이라는 깡패 3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 “친공 판사를 타도하자”며 난동을 부렸다. 2심 때 조봉암은 간첩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평화통일

민주당은 진보당 사건 때 자유당과 합세해 조봉암을 고립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민주당 김준연은 “평화통일 발언이 대한민국 국시를 도끼로 찍는 것과 같다”며 마녀사냥을 편들었다.

그렇게 조봉암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을 재건하거나, 진보당과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도 입건”하겠다고 진보 인사들에게 으름장을 놔다.

2011년이 돼서야, 대법원은 재심 공판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봉암의 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은 아니었고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았다. 진보당은 지식인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이었다. 그가 사형됐을 때도 조직적인 항의 행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당과 달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조직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마녀사냥과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는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그 뒤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보당 사건’ 때와 달리 우리에게 노동자 조직의 단결이라는 마녀사냥에 맞설 무기 또한 생긴 것이다.

양효영

운동 속의 논쟁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스타일’식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마녀사냥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올해 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자주 없이는 민주와 복지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10월 초 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진보당 이의엽 전(前) 정책위의장은 미국에 굶질대는 박근혜를 비난하며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명제는 엄연한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단체제”가 유지돼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붓는 한,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정책연구원 박경순 부원장은 “10·4 선언 이행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물론 남한 지배자들이 북한을 핑계로 국내에서 반민주적 행태를 정당화하고 운동을 탄압하는 건 분명 사실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군비를 대폭 증강하면서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분노스럽다.

분단체제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분단체제”나 종족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분단이 없는 나라에서도 상당한 억압과 독재가 존재할 수 있다. 과거 아르헨티나·칠레 등 남미 나라들은 분단

되지 않았지만, 가혹한 군사 독재와 억압을 겪었다.

심지어 미국과 대립하며 ‘자주’를 지킨다는 이란과 쿠바에서도 독재 정권하에서 노동자·민중은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란 음모” 마녀사냥에 광분하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건 60년 넘게 지속된 분단보다는,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는 대외 지정학적 상황과 더 관련 있어 보인다.

둘째, 민주주의의 진정한 동력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경험을 돌아보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진전이 있어도 국내에서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예컨대 2000년 6·15 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천 명 이상을 구속한 정부였다. 또한 10·4 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서는 일심회 사건을 터뜨려 당시 민주노동당을 탄압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자본축적의 독자적 기반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대한 노동계급이 형성됐다. 따라서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를 쟁취하는 핵심 동력은 노동계급의 투쟁과 조직(노동조합과 노동자 정치조직 등)이었다.

셋째,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의 극복과 민족 자주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부르주아 일부와 계급 동맹을 맺자는 전략은 노동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계급들을 한데 묶는 민족 단결을 위해, 노동계급의

투쟁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낳곤 한다.

그래서 자주파 동지들은 노동계급 투쟁에 헌신하다가도 ‘민족화해’를 고리로 계급 동맹을 추진하면서 모순에 부딪히곤 했다.

지금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협조하면서 진보당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4 선언 이행에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공허하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당을 포함해 계급을 뛰어넘는 ‘범국민연대’를 기대할 게 아니라, 반제국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영익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선한 제국주의는 가능할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뉴라이트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최선이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이를 전파한 일본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선한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효과가 있는 없든 모든 식민주의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문명화’된 식민지 정책을 내세운 것을 격하게 비판했다. 식민 지배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주류 한국사학계가 민족주의에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일제의 식민사학을 재탕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 사회에서 생산력이 계속 떨어지다가 19세기에는 완전히 파멸했다고 과장한다. 이런 조선 경제를 살려낸 게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조선에 자본주의 맹아가 없었으므로 제국주의 침략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진국도 선진국의 기술, 제도, 자본을 도입해 자본주의로 발전(근대화)할 수 있다.

실제 독일, 러시아, 일본 등에서 근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즉, 일제의 식민 지배가 없었더라도 자본주의적 경쟁 압력에 직면한 조선은 위로부터 근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 이른바 광무 개혁이 그것을 보여 준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광무 개혁이 황제권의 강화 등 근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전근대적 요소’가 혼재·강화되는 현상은 새로울 게 없다. 러시아에서는 차르 황제가, 일본에서는 천황제가 자본주의 발전에 앞장서지 않았던가.



강제동원돼 혹사당하다 죽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부수적 피해자’라고? 일본 규슈 탄광의 한국인 합숙소에 쓰여진 애절한 낙서.

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총독부의 ‘근대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런 폭압적 기구의 유산이 이후 박정희 독재로 계승돼 자본주의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도 수탈이 아니라 근대화 사업으로 치켜세운다.

또,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시기에 철도 건설 등이 있었으니 민족주의 사학이 식민지 수탈을 부각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레닌도 지적했듯이, “철도 건설은 언뜻 보기에 … 문명을 보급하는 사업처럼 여겨

진다. … 그러나 [자본주의는] 철도 건설 사업을 …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인구를 억압하는 도구로 바꿨다.”

자본주의 전환

다만 기존의 민족주의·스탈린주의 좌파는 이러한 수탈을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약점이 있었다. 이런 입장은 식민 지배 속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했고, 그 속에서 노동계급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순히 일제 시대에 근대화가 진전됐다는 것을 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피식민지의 가혹한 시련”은 “한국인에게는 …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발전 방향은 자본주의적 발전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요하려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찬미한다.

이들은 기아선상에 놓여 있던 빈농, 초착취와 폭력적 노무 관리에 시달린 노동자, 전시 강제 동원 속에 죽어간 수십 만 명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부수적’ 피해 줌으로 여긴다. 자본주의 전환에 성공했으니 “피식민지의 가혹한 시련”은 “한국인에게는 …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 시대에 ‘경제의 고도 성장’이 계속됐던 것처럼 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태평양 전쟁으로 식민지 경제가 붕괴한 1941~45년 기간의 통계를 누락한다.

실제로 식민 지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정체와 저성장에 빠진 바 있다. 그래서 많은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 식민 정책 때문에 성장이 저해된다고 독립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민족주의 프로젝트가 제기됐던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시대에 ‘근대 사회를 운영할 세력’이 출현했다고 강조한다. 바로 친일 엘리트, 즉 조선인 자본가와 국가 관료 들이다. 식민지 근대화론

이 자연스럽게 친일파 복권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물론 식민지 근대화론은 노동자도 이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등 근대적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그러나 착취하기에 더 알맞은 존재가 된 것일 뿐이라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계급’으로 등장했다는 것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는다. 실제로 조선 노동계급은 원산 총파업 등 여러 파업을 통해 일제에 항거했다. 그 잠재력은 해방 이후에도 미 군정에 맞선 30만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 지배가 남긴 유일한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바로 노동계급의 형성일 것이다.

당시에 식민지를 통한 근대화 외의 다른 진보적 대안은 무엇이였을까? 좌파 민족주의와 스탈린주의는 모종의 민족 경제를 대안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로 세계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력에 대항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탈식민지 과정에서 이들 역시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귀결됐다.

가장 진보적 대안은 선진 제국의 노동자 혁명과 피억압 식민국가의 민족해방 혁명이 결합함으로써 비자본주의적 근대화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기 10여 년 전, 마르크스는 전근대적인 러시아의 농촌공동체가 서유럽의 노동자 혁명과 결합될 경우,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된 뒤에 벌어진, 1910년 일제의 조선 침략은 불필요할 뿐더러 반동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한규한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 운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대체로 좌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반격을 가하고자 한다.

유신의 정치적·생물학적 후예로서 이명박과도 구분되는 ‘정통 보수’ 박근혜의 당선으로 뉴라이트는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박근혜 자신이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하고, 김기춘 같은 유신 망령을 청와대로 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뉴라이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단순히 ‘교과서 수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대안 교과서》)를 발간했다.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검정 교과서 채택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와 뉴라이트의 ‘밀월’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박근혜는 2005년 뉴라이트전국연합 출범식에서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토대”라며 치켜세웠다.

전경련 역시 기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 삼아 왔다. 전경련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를 후



왜곡 투성이 ‘역사교과서를 지켜 달라’는 뻔뻔한 우익들.

원해 왔고, 《대안 교과서》 제작 자금을 댔다. 2007년에는 교육부와 손잡고 경제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내부 단속

이들은 기존 교과서가 ‘한국 경제를 유례 없는 성공으로 이끈 기업인과 대기업의 성과를 주목해 서술하지 않는다’고 불평해 왔다. 사실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기는커녕 매우 친기업·친시장주의적 인데도 이걸로는 성에 안 찬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야말로 이러한 성공을 일군 주인공이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은 불가피했고 견뎌 내야만 했다는 것이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것은 경제 위기 시기인 지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주입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최근 교회사 경제교과서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터무니 없

는 왜곡도 했다.

현재의 우파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지난 몇 년 사이에 더한층 고조된 동아시아 국가 간 긴장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남한 국가가 처한 위기 때문에 우파와 지배자들은 히스테리컬한 마녀사냥을 일삼는 한편, 역사를 헤집으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도 경제 위기와 중국의 부상이 낳은 위기감 속에서 우익들이 ‘자학사관’을 비판하며 역사 왜곡을 본격화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 사상적 내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머릿속을 통제해 우파 지배를 유지하겠다는 저들의 불순한 시도에 맞서야 한다.

이현주

▶ 16면에서 이어짐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악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악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가 투쟁을 했고, 혹심한 탄압 속에서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이런 투쟁이 대중의 교육개혁 열망과 결합돼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전교조는 이미 25년 전 창립 때부터 정권의 공격 표적이었다. 국가 이데올로기와 노동계급 재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급에게는 영 못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의 적대감도 그런 연유다.

게다가 전교조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정부가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내자마자 8백여 개 단체들이 모여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범외노조화 저지 긴급행동’을 결성했다.(그 이름은 지금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으로 바뀌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노동조합에 이토록 광범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까.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됐다는 것도 균형 잃은 비판이다. 물론 전교조 지도부가 학교 비정규직들을 진지하게 노동조합으로 포용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 이는 전교조가 지도부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고용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릇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후진적인 조합원들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가 정식 명칭대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돼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해 왔다.

한편,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이익을 방어하는 것 자체가 조합주의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핵심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은 종종 전교조가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아니라든지·구타·관료적 억압 등에 맞서 참교육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조건 방어와 학교 혁신 둘 다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한쪽 날개를 접으면 전교조는 투쟁의 창고를 훌륭하게 비상(飛上)할 수 없을 것이다.

조수진 전교조 대의원 김인식



왜 자본주의 국가는 고쳐 쓸 수 없는가

오랫동안 절판된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새롭게 출판됐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가.

이제 독자들은 왜곡되고 악마화된 레닌의 이미지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광범위한 곡해를 벗어던지고, “국가의 폐지를, 즉 모든 조직적·체제적인 폭력의 폐지를, 인간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 사용의 폐지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대선 개입과 마녀사냥 등을 통해 국가 기구의 추악함이 나날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책이 출판된 것은 더욱 반갑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20세기 초 널리 퍼져 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왜곡에 맞서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원상복구”했다.

오늘날은 자율주의와 개혁주의의 마르크스주의 왜곡뿐 아니라 스탈린주의 체제의 끔찍한 경험과 실패 때문에 사회주의는 숨막히는 관료적 일당 독재 체제와 동일시되고 있다. 옛 소련, 동유럽, 북한 등지에서 일어난 일의 책임을 ‘레닌주의의 오류’로 돌리는 생각은 심지어 급진 좌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레닌의 국가론은 스탈린 체제의 일당 독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국가와 혁명》에서는 정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혁명은 혁명정당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소비에트(노동자·병사 평의회)로 조직된 평범한 노동자 대중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레닌은 대중의 창조적 잠재력을 철저히 신뢰했다. 레닌은 “근로 민중을, 빈민을 일상적 국가 행정 업무에 끌어들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주의에서는 “문명 사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대중이 일어나 투표와 선거뿐 아니라 일상적 행정 사무에도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군대·검찰·경찰 같은 국가기구는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1973년 칠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온건한 사민주의 정부가 타도됐다.



《국가와 혁명》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레닌 지음, 문성원·안규남 옮김, 아고라, 230쪽, 15,000원

레닌은 국가가 중립적이고, 서로 싸우는 개인이나 계급 들을 중재하려고 존재한다는 신비화된 관념을 비판했다.

국가의 존재는 “계급 대립들이 화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엥겔스가 지적했듯이, “고대국가와 봉건국가가 노예와 농노를 착취하기 위한 기관이었듯이, 근대의 대의제 국가 역시 자본에 의한 임노동 착취의 도구이다.”

강제력

독자들은 그래도 민주공화국은 다르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자들은 헌법적 외피를 두르고 국가가 중립적인 것처럼 행세한다. 또,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의 공공

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레닌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는 군대와 경찰과 같은 강제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법원, 군대와 같은 국가 관료 기구들은 “수천 가닥의 끈으로 부르주아지들과 연결”돼 있고, “항상 압제적이고 기생적인 관료 정치를 동반”한다. 이들 자본주의 관료 기구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도 통제받지도 않고, 상명하복식의 엄격한 위계제로 조직돼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선출된 정부와 의회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고, 자본가들과 공모해 어떠한 진지한 개혁 시도라도 무력화시킬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백 년간 국가를 민주화하려는 시도, 의회를 통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거듭 실패해 왔음을 봤다.

따라서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기존의 국가 집행기구와 관료들의 방해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레닌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물론 레닌은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 형태의 차이점을 무시하지 않았다. 의회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훨씬 수월”하게 한다는 것도 인정했고, 필요할 때는 부르주아 의회제라는 ‘돼지우리’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레닌은 “몇 년에 한 번씩 지배계급의 어느 부위가 의회를 통해서 인민을 억압하고 짓누를지를 결정하는” 부르주아 의회제도는 “언제나 소수를 위한, 유산계급만을 위한, 부자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을 보고 “노동계급은 단순히 기존의 국가

기구를 그대로 장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기존의 국가는 파괴되고 분쇄돼야 하며 노동자 국가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뮌은 옛 국가 권력의 물질적 도구였던 상비군과 경찰을 해체했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완전한 선거제와 소환제를 도입했다.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 그들의 모든 특권을 없애고, 공직자들의 보수를 보통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낮췄다.

이런 노동자 국가는 “부자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처음으로 빈자를 위한 민주주의,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억압자, 착취자, 자본가 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련의 제한을 가한다.”

나아가 자본가들이 소멸하고 더는 어떠한 계급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사회는 자유롭고 동등한 생산자들의 결합의 토대 위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것이며, 전체 국가기구를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즉 박물관에 물레 및 청동도끼와 나란히 놓을 것”이라는 엥겔스의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 국가조차 점차 소멸해야 한다는 게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레닌의 공통된 견해였다.

레닌이 이끈 노동자 국가는 내전과 외세의 군사적 개입, 산업의 파괴와 노동계급의 해체, 혁명의 고립 등으로 결국 10년 만에 스탈린주의라는 괴물로 변질됐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은 평범한 대중이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 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힘껏 보여 줬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무수한 참상·야만성·불합리·추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어야 한다.

강철구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다.

상위 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해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하위 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삭감한다. 최하위 그룹 대학에는 재정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 퇴출시킨다고 한다. 상위 그룹에는 정원 감축을 자진 유도하고 하위와 최하위 그룹에는 정원이 차등 조정된다.

세 그룹의 비율, 재정 지원 삭감 규모, 상위 그룹 정원 감축 방안 등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새 안이 대학 시스템 전반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높이려는 방안임은 분명하다.

이것은 대학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엘리트주의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계급적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상위’ 대학으로 분류할 그룹은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고 이름난 대학들로 이뤄질 게 불보듯 뻔하다. 그런 대학일수록 부잣집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노동계급 자녀 비중이 낮다.

사실,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은 이미 소수 상위 대학들에 집중돼 왔다. 2009년 교과부가 대학 1백88곳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에 48.9퍼센트가 지원됐다.

새 구조조정 방안은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대학 부실에 책임 있는 사학법인에는 고통이 아닌 특혜를 주려 한다. 법인 해산 시 대학의 잔여재산을 돌려 주려고 사학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이다.

주류 언론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낭비를 개탄하며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에 가도 될 사람과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을 누가 결정할단 말인가?

엘리트주의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은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재원은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재정 부족으로 대학 간 차등 지원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만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지배자들의 고질적 엘리트주의와 경쟁 맹종에서 비롯한 편견일 뿐이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도 감축할 예

정이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지방대의 정원만 크게 줄였고 수도권 사립대학은 도리어 정원을 늘린 것이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방의 서열 하위권 대학들이 더 큰 압력과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은 교육의 목적을 왜곡하고 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하기 십상이다. 폐해는 대학을 경쟁과 수익성 잣대로 평가하는 구조조정의 논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지 경쟁의 불공정함 때문이 아니다.

전체 고등교육 재정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 경쟁적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게임의 룰을 어떻게 짜든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다. 대중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개성이 존중되고 비판적 사고가 활성화되는 대학 교육이 가능하려면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

정상적 대학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한 대학은 퇴출이 아니라 국립화해야 한다. 부실 재단을 퇴출하고 국고 지원을 통해 국립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의 수를 늘릴 뿐 아니라 국립대의 재정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삭감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고를 대폭 늘려 학생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교육 여건을 향상해야 한다.

정인희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처우 개선 위해 파업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스스로 많은 것을 일궈왔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6월, 2만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투쟁을 벌이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기간제법을 뛰어넘어 1년 이상 상시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쟁취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호봉제, 상여금, 명절휴가비 같은 핵심적인 처우개선안이 빠졌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근속수당 인상 방안(내년부터 1만 원, 2018년부터 2만 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임금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식비(식대)조차 차별하는 학교 현실을 방지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내년 초 고용기간이 만료돼 해고 위협에 처해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만 무려 4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을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을 유지해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보수교육감들이 수개월 동안 무성의하게 교섭하는 것도 이런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밝힌 것처럼 “총파업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파업 같은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될 때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줄줄이 복지공약을 후퇴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전진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정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하자. 강력한파업과 투쟁을 조직해 간절히 염원해왔던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쟁취하자.

조명지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 사기를 치더니 이제 임금 삭감 등 공격을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각종 수당도 깎겠다고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부문으로,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 연금 공격도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공무원도 고통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먹튀’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화살을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수작이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뒤에는 국민연금 개악 카드도 다시 꺼내려 할 것이다.

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고 복지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간질하려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개악한다고 국민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도 공격하고 있다. 공무원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자로 나아가갈 임금 삭감, 연금 개악으로 득을 보는 것도 기업과 부자들이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역시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한다.

시간제 공무원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보다 절반의 시간을 일하면서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도 받지 못한다. 승진에 필요한 경력도 절반만 인정된다. 전일제 공무원이 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공무원 4천 명을 이렇게 열악한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공직 사회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공무원 신규 채용을 통제해야 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많은 행정 업무를 계약직이 하고 있고, 일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다 2008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5개 공무원노조 공동투쟁.

민간위탁으로 넘겨졌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한 행정 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해야 한다. 지금 있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마저 여기는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해서 초과근무를 줄이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을 상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을 개악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공격하는 것은 결국 복지 ‘먹튀’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다. 노동자 운동은 여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진정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에 반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임금삭감, 연금개악, 시간제 공무원 도입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이 글은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정당에 1만 원씩 후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떳떳한 일입니다.

만약에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이런 소액의 깨끗한 후원조차 죄가 된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교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조차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하위직 공무원의 자

주적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를 공격하면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이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옛 한나라당에 돈을 낸 것은 태반이 무협미의 내사 종결이었고, 그나마 5백만 원 냈다고 기소된 교장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민간인에게 몇천만 원씩 주면서 여론조작을 하고 특정 정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된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지만, 진정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고 국정원이고 우릴 기소한 검찰일 뿐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길입니다.

1퍼센트의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자금으로 기소된 모든 공무원과 교사는 무죄입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박천석·장호중 지음, 노동자연대합께, 64쪽, 3,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인터뷰

“괴물 같은 삼성을 바꿀 때까지 싸울 것”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 고위 임원 회의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210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는 노조 설립 시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초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그룹 핵심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삼성의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여소야대인 한노위에서 이견회를 중심으로 세우지 않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한 민주당은 삼성에 맞서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 줬다. 반면, 삼성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저항해 왔다.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를 만든 ‘최로 해고된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사진)’이 삼성에 맞선 투쟁을 말한다.

“삼성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서 많이 씁쓸하고 분노가 생겼어요. 회사가 매일 불법적 수단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노동자들을 구사대처럼 동원해 방호인력, 노조활동 대응인력, 여론 주도인력 등의 역할을 주며 모의훈련까지 시켰어요.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면서 전쟁을 해야 할 대상, 체증하고 감시하며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건을 보면 저희가 에버랜드 인근 원룸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외부세력’과 삼성계열사 문제인력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삼성지회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회유하다가 통하지 않자 인사팀 직원들을 앞세워 협박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어요. 어이없게도 폭행을 자행한 직원은 징계는커녕 승진됐고요, 이

게 바로 삼성스타일이예요.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백과사전’을 제작해 개인취향과 사내지인, 자산, 주량 등을 꼼꼼히 문서로 만들어 활용 중이라고 문건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예요.

삼성엔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건을 보면 삼성지회 탄압은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묘사돼 있어요. 회사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설립 움직임에 사전에 감지하고는 복수노조 시행 직전에 ‘알박기’ 노조인 친사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2년간 저희 삼성지회는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게 됐죠.

또, ‘부당노동행위 회피를 위해 노조 설립 전에 주동자를 징계 해고’라고 나와 있어요. 사측은 그동안 내가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해고라고 발뺌했죠. 하지만 이번 문건에서 노조탄압 목적으로 저를 해고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에요.

주동자를 해고해서 격리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하고,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등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탄압도 문건에 나온 삼성의 대응 방안에 따른 거예요.

삼성은 오만하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이 지경까지 왔어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정부기관들 모두 삼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아요. 백혈병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부기관들 하나 믿지 못하겠어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 발표를 했고요. 개탄스러워요.

삼성도 전체 그룹의 역량을 총집중해서 정보기관보다 치밀한 문건을 만들며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말살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삼성지회는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이 또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에 맞서 조금씩 승리의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봐요.

삼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어진



조장희 부지회장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6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화물연대

일을 해도 빛만 쌓이는 현실을 바꾸자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화물 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건강이 망가져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평균 4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도 화물·운송 노동자의 순수임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최근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의 소득을 지급으로 환산해 보니 2천1백 97원에 불과했다. 그러니 ‘핸들 잡으면 신용불량, 핸들 놓으면 실업자’라는 말이 나온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권영환 조합원은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아 한 달에 1천3백만 원을 벌어도 기름값으로 절반 쓰고, 타이어 교체나 차량 수리비에다, 고속도로 통행료로도 매달 80만 원, 심지어 매달 22만 원씩 번호판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2012년에만 조합원 31명이 장시간 운전 중 사망했다. 그러나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다.

거짓말

화물연대는 이 때문에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번호판 장사꾼들에 게만 좋은 직업운송의무제 폐지, 자기 돈으로 산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자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화물 노동자들 2008년 5월 화물연대 파업.

이름으로 해 달라는 번호판 실명제, 고속도로 통행료 전차중 전일 할인제 시행이다.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은 “표준운임제는 이미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다. 고속도로전차중전일제 할인은 지난해 대선 전에 박근혜가 직접 약속했다. 그런데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짓 정권”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화물연대는 5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며 ‘화물·운송 노동자 10만 권리선언’을 진행 중이다.

또 “10월 26일 집회 이후 성과가 없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투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6월 22일 화물연대 확대간부전진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천2백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서 결의를 보여 줬다.

10월 26일 성공적인 총력결의대회를 바탕으로 차분히 현장의 힘을 강화하며 힘 있는 파업을 준비해 나가자.

강철구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당장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기는 어려워졌다. 중앙정부 재정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 매각을 승인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은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홍준표는 국정조사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는 지자체장이 국회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투쟁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수십 명이 여전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10월 17일에 진주에서 열린 원탁회의에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법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참여연대 등 수십 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해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보고서 채택의 긍정적 의의뿐 아니라 약점도 지적됐다. 홍준표가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보고서 안에 일부 조항들은 문제점도 있다.

건강한 적자

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는 보고서가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불건강한 적자’가 있음을 공식화해, 앞으로 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구분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결과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개원 방안을 두고 몇 가지 타협안(시립병원화, 특수병원화, 마산의료원 분원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원래대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고서가 정한 마감 시한이자 경상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30일에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투쟁에 계속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호중

기아차

KD 외주화 중단하라

10월 25일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모두 끝났다. 지부와 지회 3곳에서는 범 민주와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가장 큰 공장인 화성공장과 상징성이 큰 소하공장에서 보수적 후보가 당선한 것은 안타깝다. 특히 화성 공장에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 다수가 결선 투표에서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민주파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투쟁 등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실망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일들이 ‘민주파라고 다를 게 뭐냐’라는 냉소적 분위기를 낳은 듯하다.

특히 유준형 동지의 자결과 그 후 장례 투쟁에 있어서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이 연대와 투쟁보다는, ‘합리적’ 타협을 모색했다. 필자는 이후 많이 반성했다.

또 민주와 지도부는 2013년 임금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별도 요구안 1번으로 상정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와 KD공장 외주화를 합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지금도 KD공장의 비정규직 조합원 50여 명은 외주화 저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고공농성과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측은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고소·고발·징계를 하며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

이런 탄압에 맞서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선거도 끝난 만큼, 이제 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아차에서 유준형 동지를 보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도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조립 공장 조합원들의 특근 거부 투쟁

한창 선거 중에 22대 화성지회 지도부는 사측에 마지막 선물이란도 안겨 주듯 10월, 11월 생산특근을 합의했다. 이는 ‘특근합종틀 인상 합의 전까지 생산특근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을 간단히 무시한 것이다.

이런 결정과 사측의 현장 탄압(안전사고로 인한 라인 중단을 핑계로 고소·고발)에 맞서 조립 1부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특근거부 투쟁을 진행했다.

비록 다른 부서의 지원으로 생산에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특근거부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다.

게다가 투쟁이 3공장으로 번지고 있다. 3공장에서도 회의를 위반해 발생한 라인 중단으로 사측이 고소·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맞서 조합원들이 11월에 생산특근을 거부할 계획이다.

이런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이 공동으로 진행된다면, 연대가 더 확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측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1공장과 3공장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투적 활동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거듭 약속을 뒤집는 사측에 대한 분노의 분출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울산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갖고 있는 SK는 2004년에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SK와 연관된 하청업체들도 노조와의 임금단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SK가 새로 짓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8시간 초과 노동과 일주일 단위의 초단기 계약 등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여름에는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져 노동자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과 건설

현장에 노조 간부 출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간부들은 이미 S-OIL, 삼성정밀화학, 한화석유를 포함해 국가 기간산업인 화력발전소까지 출입하며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SK만 활동가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휴식 시간

그런데 최근 SK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에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한 조합원 4백50여 명의 출입을 금지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아낸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3천여 명은 10월 17~18일 서울 도심과 SK 본사 앞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였다.

결국 SK는 사실상 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받아들였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SK를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한 발 물러나게 한 것이다.

그러나 4백50여 명의 복직을 약속했던 하청 업체들이 갑자기 이행을 거부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출근했던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공사 현장을 박차고 나와 ‘조합원 전원 복귀’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최인찬·김지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서울일반노조 지도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부당해고에 맞서 민주노조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 8명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현재는 조합원 3명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9월, 투쟁하는 조합원 3명에게

‘서울일반노동조합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이 왔다. 징계 사유는 첫째 “서울일반노조 비방 및 폄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과 둘째 “본회 투표 결과에 반해 투쟁[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토론과 논쟁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게다가 노조 지도부가 ‘성명서’라는 형식을 문제 삼자, 조합원들은 이미 ‘해명 성명서’를 내고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둘째, 이미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 5명을 내세워, 노조 지도부가 계속 투쟁하겠다는 3명에게 징계를 위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다. 더 투쟁한다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당하다.

따라서 이번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이런 징계는 노조 지도부가 승인하지 않는 투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런 시도는 단결이 아니라 분열만을 낳을 뿐이다.

성지현

Report@left21.com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노조는 10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회보험지부 72.8퍼센트, 직장노조 68.3퍼센트 찬성으로 통합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더 큰 하나의 노조로 통합·단결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진보정당 분열이 노조 안팎의 경쟁·다툼으로 이어져 투쟁 건설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점이 있었기에, 이번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번 통합 투표 결과는, 지난 13년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내오면서 분열과 반목으로 돌아온 건 노조의 하향평준화였다’는 조합원들의 각성을 보여 준다.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사측이 한쪽을 죽여 놓고 나면, 다른 쪽도 점점 그에 맞춰진다. 단협 조항이 점점 줄어들면서 임금·복지후생 전반이 후퇴했다. ... 2000년 통합 당시에는 (임금 수준이) 유급기간 중 높은 수준에 속했다. 복수노조로 오면서 노노 갈등으로 조직력을 임금인상에 결집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동 투쟁을 전개하면서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끼 색깔(사회보험지부는 빨간색, 직장노조는 파란색)에 상관없이 같은 버스를 타고 상경 투쟁을 하면서 포용력도 커지고 연대의식도 커졌다. 그 동안 한 노조만 집회를 하면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다. 그런데 두 조직이 같이 공동 집회를 하니까 유급으로 인정해 줬다. 두 조직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사측에서도 손 대기 어려운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먹튀’는 분노와 불만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번 양 노조의 통합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 양 노조의 향후 통합 과정엔 상급 단체 결정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려면, 강력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합노조가 상대적으로 더 투쟁적이고 좌파적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이다. 따라서 양 노조 내 선진 활동가들은 실천과 토론 속에서 민주노총 가입의 필요성을 입증해 내야 할 과제가 있다.

윤필연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11월 6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자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10월 8일 국정원장 남대준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수만 명의 촛불에게 보란듯이 ‘개악’안을 내놔다. 정치 개입 말했더니 되려 “대공수사 강화”로 답했다. 이는 촛불운동을 주눅들게 만들어 국정원 규탄 운동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다.

국정원은 이미 예전부터 ‘대놓고 거꾸로’ 행보를 걸어 왔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이 커지자 국정원은 이른바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마녀사냥했다. 그러자 우파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것에 ‘종북’ 딱지를 붙이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틀어 막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런 마녀사냥을 연막 삼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공약을 대량 ‘먹튀’할 수 있었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시기에 재벌들의 뒤를 봐주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공약 뒤집기를 밀어붙일 것이다. 이 때문에 진보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노골적인 반동 정책 또한 계속 시도될 것이다.

반동

그러나 이들이 벌이는 마녀사냥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빌미로 검찰 총장 채동욱을 찍어 냈고,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NLL 대화

록’이 마녀사냥용 무기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사실 이런 자들이 ‘법과 질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과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 병역비리 문제 등을 보라.

그런 점에서 지난 <레프트21> 113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강화 계획을 비판하는 기사가 빠져 있어서 아쉬웠다. 국정원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정당성을 공격하는 쟁점이므로 꾸준히 폭로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을 넘어 보훈처, 국방부의 조직적 정치 개입과 법무부의 외압설까지 폭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원 정치 공작을 규탄하는 촛불도 계속 타올라야 한다.

이아혜

여성학자 정희진 씨에 대한 반론

징병제는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한겨레> 칼럼니스트이자 여성학자인 정희진 씨가 최근 <한겨레>에 쓴 칼럼 ‘징병제는 최선의 선택’에서 모병제를 비판했다.

정희진 씨가 생각하는 모병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를 사회로부터 이탈·분리시켜 군대와 군대가 저지르는 문제들을 은폐시킨다. 둘째, 군대의 “전문화”, “민영화”를 낳아 군대가 “전쟁 주식회사”로 기능하게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들이 군역을 전담케 한다.

그는 더 나아가 징병제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지원병 제도는 전쟁과 군대로 인한 제반 논의가 특정 소수 집단의 문제로 축소 ... [반대로] 보편적 의무로 운영되는 징병제는 어쩔 수 없이 전사회적인 관심사가 된다 ...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역설이다.”

그러나 징병제가 지속돼 온 한국의 군대를 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희진 씨는 징병제가 군대에 대한 “시끄러운” 상태를 낳아 군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징병제는 군대를 “원래 그런 곳”으로 고착화시킨다. “모두”가 “일시적으로” 군대를 거쳐 가야 하는 현재의 징병제하에서 병사와 그의 주변인들은 군대라는 공간에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저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군대에 관여하면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군대는 유사시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집단이다. 베트남과 광주에서 저질러진 민

간인 학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는 자국 지배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개인과 집단을 살상하는데 쓰인다.

이와 같이 양심과 본능에 반하는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폭력과 부조리의 온상이자,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세뇌의 장이다. 사회적 관심이나 참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런 군대의 본질적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군대의 “전문화”와 “전쟁 주식회사”의 변성 역시 징병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군대의 성격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살인 무기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군역 전담에 대한 정희진 씨의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하의 사병들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노동계급이다. 모병제하의 군대는 노동계급의 수많은 일터 중 하나다. 징병제로 인해 “모병제하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곳 대신 다른 열악한 일터를 전전할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들의 처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없애야 할 것은 단지 “모병제하의 군대”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군대,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착취를 강제하는 자본주의 체제다.

정희진 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한다. 물론 군대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 군대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그렇다. 노동계급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면, 체제의 수호자인 국가, 국가의 지배수단인 군대도 사라질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좋다”면, 누군가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하니, 모두가 비정규직이 돼야 할까. 누군가가 ‘살인 무기’가 되어야 하니, 모든 이가 ‘살인 무기’가 돼야 할까.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 존재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처럼 군대·국가·자본주의의 폐지가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대안일 뿐, 모병제든 징병제든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현재 한국의 조건에서 징병제의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군대 규모의 축소를 얻어질 유·무형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상당한 데다, 군대를 거부하는 개개인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병제 도입에 국방비 증가 등이 뒤따른다면 그것의 진보적 의의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을 위한, 군축과 평화, 복지를 지향하는 운동을 통해 모병제를 이뤄내야 한다. 또한 군대 자체의 본질적 성격을 폭로하며 군대·국가·체제를 모두 철폐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황다연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서울 남부지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란 무엇인가

연사 : 최일봉(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L&B부동산경제연구소 강의장 (교대역 1번/13번 출구 2백 미터 농부의 아들 2층)
참가비 : 일반 4,000원(학생 3,000원)
문의 : 010-9401-1370

서울 중북부지구
유럽의 파시즘: 왜 성장하는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연사 :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예술평화 806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000원(청소년 1,000원)
문의 : 010-9820-5698

서울 서부지구
박근혜 정부의 복지 먹튀와 대안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

연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일시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한국여성노동자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서교동 방향으로 500미터 직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뒤편 조선화로구이 골목)
참가비 : 3,000원(학생·청소년 2,000원)
문의 : 010-8288-2652(문자도 환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하는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연사 : 김하영(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1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고려대학교 서관 314b
참가비 : 2,000원 | 문의 : 010-5678-8630

경기 지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 일양 송전탑 공사 강행...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 장호중(<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수원역 지하상가 1번출구 3백미터 직진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000원(학생 1,000원)
문의 : 010-8700-4647

울산 지회
오바마, 아베, 박근혜 시론평, 김정은... 무엇이 동아시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가? —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연사 : 김영악(<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학생 2,000원)
문의 : 010-5004-1880

인천 지회
박근혜 정부의 복지 먹튀와 대안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

연사 : 장호중(<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인천본부 1층 강의장
참가비 : 일반 2,000원(학생 1,000원)
문의 : 010-2816-7181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의 땀과 정성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레프트21> 112호를 받아 보았습니다. 동지들이 보내주는 정성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답신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국정원 조사에 이어지는 검찰 조사와 공소장을 살펴보니라 답신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밖에서는 <레프트21>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레프트21> 112호를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과 동지들의 땀과 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3.10.10.
서울구치소에서 홍순석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조수진 전교조 대의원, 김인식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니라 국정원이다. 국정원장의 “격노”로 검찰은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풀어 줬다.

박근혜는 진작부터 전교조에 적대적이었다. 박근혜는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전교조를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해충”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희가 4·19교원노조를 “좌경용 공세력”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교사 1천 5백여 명을 해고하며, 54명을 10년 넘게 구속했던 것에 이은 ‘부전여전’이다.

새누리당은 전교조가 ‘밥그릇을 지키려고’ ‘학생들의 수능을 볼모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키려는 “밥그릇”은 학생과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이다. 수능을 볼모 삼아 학생들에게 무한 시험 경쟁을 강요하는 세력

은 이 나라 엘리트와 권력자들이다.

박근혜 정권이 통과시키려는 친일·친미·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야말로 학생들에게 매우 해롭다.

그래서 전교조는 필요하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노동자 운동을 상대로 계급 전쟁을 천명한 것이다. “내부의 적”인 전교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계급 전쟁

그러나 압도 다수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권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12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했다.

물론 전선은 불균등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7월에 규약 개정 문제에서 투항적 대응을 한 바 있고 기아차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에서 친사용자 후보가 당선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선이 “신관권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선불복론’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교조 조합원들 압도 다수의 시정명령 거부는 노동계급의 응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 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뛰쳐나가 합법노조를 만들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69퍼센트 조합원들이 비록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빼앗기더라도 명분을 얻고 노동자 운동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택했다. 지금 노동자 운동은 전교조 조합원 다수의 선택에 감동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총투표 전술이 옳았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해, 전교조 지도부의 총투표 전술은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도박이었다.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 한다는 생각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총투표 전술의 핵심 문제점은 지도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월 19일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그 무거운 결정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던 것이다.

종기로는, 정부가 최후통첩을 한 직후

열린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거부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가 설정한 기한인 10월 23일까지 연가 파업을 비롯해 총력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한 달 동안 정부에 맞서 투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보냈다.

물론 대의원대회에서 총투표가 결정된 이상, 거부표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술을 전환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일부 소수 활동가들은 해고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할지 말지를 투표로 물을 수 없다며 총투표에 기권했다. 하지만 조합원 81퍼센트가 투표한 것에서 보듯이, 총투표 기권 입장은 현실에서 너무 무기력했다.

툽니바퀴

한편, 중앙집행위원들은 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표방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거부표를 던지라고 호소하지는 않았다. 집행부는 총투표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부르주아적 가치관의 압력을 심하게 받았다.

다행히도, 노조 집행부의 거부 입장 표방과 거부표 선동 자체 사이에 생겨난 간극을 일단의 활동가들이 매우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전력을 다해 거부표를 조직했다.

2월 말부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동을 시작한 일단의 활동가들이 있었다. 이 작은 톽니바퀴가 10월에 수백 활동가들이라는 중간 톽니바퀴와 맞물렸다. 그리고 마침내 조합원 69퍼센트라는 커다란 톽니바퀴에 그 동력이 전달됐다.

전교조 내부에서 강력한 거부표 캠페인



전교조 지키기는 진보 전체를 지키는 것 10월 19일 1만여 명이 모인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



조영이 기자

이 일어나고 10월 들어 복지 공약을 왕창 폐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증대까지 더해 전교조 밖 운동 진영도 대부분 거부 입장에 섰다. 총투표 직전에 많은 운동 단체들이 전국에서 학교 앞 1인 시위(사실 상시정명령 거부 응원 활동)를 했다.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조합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두절미하고 총투표 전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결론론적인 평가다.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행동보다 개인들의 의지를 중시하는 견해다.

그러나 투표 결과를 통일된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가 될 것이다.

물론, 전교조는 법적 제약 때문에 파업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또, 계급 세력 균형 상 하루 이틀 연가 파업으로 법외노조화를 당장 철회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만 전교조가 정부 탄압에 맞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 파업은 필요하다.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오히려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전교조는 노동조합 인정 투쟁과 함께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 저지 투쟁도 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결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 쟁점을 던져 전교조와 나머지 운동들(특히 교육 운동)을 분열시키려 한다.

이럴 때 전교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연대 단체들도 거리로 나오고 전교조 지지·방어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에 연대 파업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당장 법외노조화를 철회시키지 못할지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또 다른 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선 대중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떤 자신감 상태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의 세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면으로 이어짐